



미국 : 뉴욕주, 노조가 있는 요양원 간호사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노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아

2020년 9월 10일에 미국의 보건 전문 학술지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노조가 설립된 요양원(nursing home)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노조가 없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사망자의 4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며, 이러한 현실은 요양원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 의료 종사자가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원의 감염 통제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위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에 초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는 요양원에 의료 종사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뉴욕주에 있는 355개 요양원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 노동조합이 있는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약 1.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노동조합과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한 이후에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¹⁾

1) Dean, Adam, Atheendar Venkataramani, and Simeon Kimmel(Pre-print), "Mortality Rates From COVID-19 Are Lower In Unionized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미국 : 캘리포니아주,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보상 근거 기준 완화

2020년 9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근거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¹⁾ 이에 따르면 경찰이나 소방관, 또는 다른 필수(essential) 공무를 수행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정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는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다른 곳이 아닌 작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보상 프로그램



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비용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간 손실에 대한 임금을 보상한다. 해당 법안은 긴급 법안(urgency bill)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안과 달리 통과 즉시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 및 노사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4만 명이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1) The LA Times(2020.9.17), “Californians who contract COVID-19 at work get additional help under new law”, Retrieved on October 4th, 2020,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9-17/california-workers-compensation-covid-19-new-law>

미국 : 노동조합들 미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최근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기사에 따르면¹⁾ 미국의 거대 노동조합들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고 한다. 이번 제소는 국제서비스노조(SEIU)와 미국노동총동맹 산별노조회의(AFL-CIO)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노동법 및 시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노동권 약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들이 사실상 강제 현장노동을 통해 건강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Richard Trumka)는 “COVID-19는 미국의 노동권 위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위반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제소에서 주장한 미 노동법/노동정책의 실패는 두 지점으로 나뉜다. 우선, 1935년 만들어진 전국노동관계법에 기반한 낡은 법제들로 인해 직노동이나 계약노동 등 많은 노동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노동자 보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팬데믹 내내 지속되었다는 점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육산업(meatpacking) 등을 필수산업으로 지정해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문을 열도록 강요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정 발급에는 미온적이었다. 관련 산업 노동자들 대다수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도 일어났다. 그 외에도 팬데믹 초기 노조 집행부 선거를 감독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의 업무를 중단시키면서 기업이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배려한 점, 안전 관련 우려를 표명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재량권을 준 점 등도 제소 사유로 꼽혔다. 조지타운대학의 조셉 맥카틴(Joseph McCartin) 교수는 “거론된 예시의 양이나 세부정보 수준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제소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록 ILO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제소는 미국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결과

적으로 인권보장 문제에 관해 여러 정부기관에 정지적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소 문안 작성을 도운 노동법 전문가 랜스 컴파(Lance Compa)는 “미국이 국제 노동규범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노동규범 준수를 강조할 미국의 발언력이 매우 약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1) The Washington Post(2020.10.7), “U.S. accused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bor laws, forced-labor protections in new complaint”, Retrieved on Oct 23th,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10/08/international-complaint-worker-protections/>

미국 : 바이든 당선을 통해 노조들이 그리는 장미빛 전망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 이후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친기업 및 반노동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것과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상대적으로 보다 노동친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미국 노동조합들의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간지 폴리τικο(Politico) 기사에서 미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승리가 곧 노동조합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¹⁾ 국제소방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

tion of Fire Fighters)의 경우 민주당 경선 때부터 바이든을 제일 먼저 지지했던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인 해럴드 샤이트버거(Harold Schaitberger)는 “역대 가장 친노동·친노동자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또한 바이든은 40여 년간의 정치 경험을 통해 여러 노조 지도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그중 두 명이 이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섯 명이 민주당 정책 권고안을 만든 태스크포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조 지도자들이 바이든 내각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바이든은 노동 조



직화 및 단체협상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별도의 워킹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의 오랜 보좌관인 스티브 리체티(Steve Richetti)는 2주마다 노조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듯 바이든의 친노동 행보와 인적 네트워크는 많은 노조로 하여금 장밋빛 전망을 갖게 하였다. 특히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단결권보호법(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이다. 즉, 단체교섭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방노동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강한 제재를 내려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일리노이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노동연구 프로그램 소장인 로버트 브루노(Robert Bruno)는 노조가입 증가가 많은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향후 민주당이 진보적 경제노선을 달성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다 해도 오랫동안 정체되어 온 노조 조직률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막대한 정치자본을 주요 노동법 개혁에 쓸 만큼 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바이든과 그 팀을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노조들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11월 선거에서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 다수당이 되는지에 따라 산적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이 무조건 친노동 성향이라고만 보기에 무리는 있다. 이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상원 의원 시절 많은 노조가 반대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노조 결성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의 기후 계획은 광업 및 제조업 일부 노동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은 노동계에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조들은 바이든의 당선이 10% 안팎으로 떨어진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 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들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Politico(2020.10.9), "Unions predict a great awakening during a Biden presidency", Retrieved on Oct 24th, 2020, <https://www.politico.com/news/2020/10/09/unions-biden-administration-426880>

독일 : 연방노동사회부(BMAS), 2021년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험료율을 4.4%로 인상 예정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21년에 적용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을 4.4%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¹⁾

독일이 예술 분야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운영 중인 예술가 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에는 2020년 현재 약 19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도 법정의료보험, 요양보험 및 연금보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술가 및 저널리스트들이 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속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의 절반(50%)을 피보험자인 예술가 및 저널리스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료의 나머지 절반 중 20%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30%는 예술가 또는 저널리스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료는 1년간 자영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며, 보험료율은 연방 내각(Bundeska-binett)의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는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장관령(Ministerverordnung)으로 매년 새롭게 결정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및 창작 분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4.2%였던 사회보험료의 보험료율은 다소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예술가의 사회보험료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보조금 형식의 연방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상폭을 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방기금의 부담부분(20%) 이외에 긴급 보조금 형식으로 약 2,300만 유로(약 301억 4,500만 원)의 연방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4.7%까지 인상이 이루어졌어야 할 보험료율의 인상폭을 크게 낮추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술가 사회보험료의 납부무기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예술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2020년 10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발표한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21년 「예술가 사회보험료 시행령(Künstlersozialabgabe-Verordnung 2021)」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단체들의 참여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늦어도 2020년 연말까지 연방법률공보(Bundesgesetzblatt)를 통해 공포되어야 한다.

1) BMAS(2020.10.20), "Künstlersozialabgabe steigt im kommenden Jahr leicht auf 4,4 Prozent",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kuenstlersozialabgabe-steigt-im-kommenden-jahr-leicht.html>



독일 : 2020년 8월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 전년대비 3.1% 감소

독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말과 비교해 약 17만 9천 명(-3.1%) 정도 줄어든 것이다. 전년대비 근로자 수의 증감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전월(2020년 7월)에 비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30명).¹⁾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2019년 8월 통계치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속 생산 및 가공 분야에서 -5.7%로 가장 크게 급감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종에서도 5.4%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속제품 생산 업종의 경우에도 4.5%의 근로자가 줄어들었으며, 전자 장비 제조업과 기계 설비업은 각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인 4.1% 감소가 있었다. 반면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5%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고용현황은 코

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근로자 수가 증가한 화학 제품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방역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가 독일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2020년 8월에 지급된 제조업 종사자의 급여는 약 222억 유로로 전년동월대비 5.7%가 감소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종사자 수의 감소도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로 실제 수령한 급여의 감소폭이 5.7%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독일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0년 8월 한 달간 독일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6억 1백만 시간으로 2019년 8월에 비해 10.7%가 감소했다. 2020년 8월의 근무일이 전년대비 하루가 적었던 것도 근로시간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 Destatis(2020.10.15), "Beschäftigte im Verarbeitenden Gewerbe im August 2020: -3,1% zum Vorjahresmonat",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10/PD20_406_421.html

스웨덴 : 정부, 코로나19 확산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침 완화를 시행

스웨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는 2020년 9월 2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건안전지침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¹⁾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르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몇 주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뢰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전보다 보건안전지침을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업무 성격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직원이 재택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주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손씻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친구들을 껴안는 등의 밀접 접촉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안전지침의 개정 및 추가 조치 등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존의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만 나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0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집단행사 모임인원 제한완화(5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조치에 관한 내용 역시 빠졌다. 보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은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가 해당 조치 실시 여부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해 주었다.

9월 24일 기자회견 이후 스웨덴 내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었으며 스웨덴 정부는 10월 22일 코로나19 보건안전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²⁾ 우선,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코로나19로 중증질환 고위험

군에게 적용되었던 특별지침(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상점 및 대중교통 이용자제)을 폐기하였다. 대신 해당 그룹에 속한 이들은 (연령과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했던) 기존의 보건안전 일반지침을 따르게 된다. 보건안전 일반지침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 머물며 가능하면 집에서 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보건청의 리사 브루어스(Lisa Brouwers) 연구원은 공공보건청의 통계에 근거하여 노인과 위험그룹에 속한 이들에게 내려졌던 엄격한 지침으로 인해 약 1,000명의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보건청은 이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권고를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 역시 고령자들이 그동안 격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또 다른 큰 변화는 집단 행사의 참석자 인원제한이 완화(50명에서 300명으로)된 것이다. 지정된 좌석이 있고, 참석자 간에 최소 거리 1미터가 유지되는 행사에는 3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변경 사항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나이트클럽과 술집 등 지정된 좌석 및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기타 집단 행사는 50명 인원제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1) The Local(2020.9.24), "Work from home, don't hug your friends': Swedish PM Stefan Löfven's warning as coronavirus cases rise", <https://www.thelocal.se/20200924/work-from-home-dont-hug-your-friends-swedish-pm-stefan-lfvens-coronavirus-warning>
- 2) The Local(2020.10.22), "Sweden scraps additional coronavirus recommendations for over-70s and risk groups", <https://www.thelocal.se/20201022/sweden-scraps-coronavirus-recommendations-for-over-70s>

영국 : 정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대응하여 새로운 고용지원계획을 발표

2020년 3월 봉쇄정책 이후 시행해 온 ‘코로나19 고용유지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이 10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영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영국 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인 ‘고용지원계획(The Job Support Scheme)’을 발표하였다.¹⁾

기존의 고용유지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휴직(furloughed) 처리된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의 80%(최대 월 2,500파운드, 한화 약 380만 원)를 보장해²⁾ 왔다. 반면, 10월 22일 발표된 새로운 고용지원계획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의 최소 20% 이상을 근무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줄어든 80% 임금의 61.67%와 5%를 각각 부담함에 따라

3)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평소 임금의 73%를 보장 받게 된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 봉쇄정책 등으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최소 근무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부담분도 없으며, 정부가 임금의 67%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최소 2021년 1월까지 강제휴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는 휴직자 1인당 1,000파운드(약 15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2단계 봉쇄정책이 시행된 지역의 숙박·식당 및 여가 관련 업체에는 월 최대 2,100파운드(약 315만 원)를 지원하고, 3단계 봉쇄정책이 시행된 지역의 기업에는 월 최대 3,000파운드(약 450만 원)를 지원한다.

- 1) The Guardian(2020.10.22), "Changes to the coronavirus job support scheme in England explaine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oct/22/changes-to-the-coronavirus-job-support-scheme-in-england-explained>
- 2) 3~7월 중에는 정부가 임금의 80%를 모두 부담하고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및 연금 부담분도 정부가 지급하였으나, 8월부터 점차 기업의 부담분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임금의 60%만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20%와 국민보험료 및 연금 부담분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 3) 즉, 총 임금 기준으로는 정부가 약 49%, 기업이 약 4%를 부담하게 된다.

영국 : 싱크탱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완화를 위해 임금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지나친 고연봉에 대해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영국의 진보 싱크탱크 오토노미(Autonomy)가 주장했다.¹⁾ 오토노미는 영국의 소득 불균형이 OECD 국가 중 9번째로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 16만 파운드(약 2억 4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상위 1%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만 제한해도 9백만 명에 달하는 중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임금을 18만 7천 파운드(약 2억 8천만 원)로 제한할 경우 최저임금²⁾을 시간당 10.5파운드(약 1만 6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불균형이 특히 심각한 예술 및 여가 관련 산업의 경우, 상위 0.64%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의 임금을 25만 1,760파운드(약 3억 8천만 원)로

제한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당 11파운드(약 1만 7천 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오토노미는 임금상한제 도입에 관한 여론과 관련하여 시장조사기관 서베이션(Survation)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54%가 임금상한제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연봉을 제한할 경우 그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69%의 응답자가 10만~3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4억 5천만 원)를 선택하였다.

한편 현재 상위 1% 고소득 노동자가 영국 총 소득세의 3분의 1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을 제한할 경우 조세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토노미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 절감과 조세 회피 감소 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The Guardian(2020.10.8), "Cap excessive pay to tackle UK job crisis and inequality, urges think-tank",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20/oct/08/cap-excessive-pay-to-tackle-uk-jobs-crisis-and-inequality-urges-thinktank>

2) 현재 영국 내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파운드(약 1만 3천 원)이다.



프랑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 항공, 숙박, 식음료, 개인서비스 및 레저서비스 산업 어려움 지속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2020년 10월 14일 새로운 부분 봉쇄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번 봉쇄조치의 여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시행되었던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아 온 산업은 다시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¹⁾ 같은 날 발표된 프랑스 경제 전망연구소(OFCE)의 발표²⁾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인 운송, 항공, 숙박, 식음료, 개인서비스 및 레저서비스는 여전히 프랑스 GDP의 9.4%를 차지한다. GDP의 1/3이 감소한 지난봄에 비해 이번 가을의 경제적 충격은 작을 테지만 동일한 산업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OFCE에 따르면 해당 5개 산업은 이미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활동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그 중 2개 부문(숙박 및 요식업 그리고 항공 산업)은 50% 이상의 하락세를 경험했다. 2020년 상반기에 임금 일자리 70만 개가 감소했으며, 이 중 1/3이 고

용비중이 13%에 불과한 해당 5개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여름부터 반등이 있었지만 이는 일부 산업에 국한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8월 말 가구단위 문화 및 여가 지출은 위기 이전 대비 35% 감소했다. OFCE 경제학자들은 3분기에 회복했던 해당 산업이 4분기에는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단위 2020년 4분기 교통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0%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및 식품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지출은 각각 32%,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봉쇄조치로 인한 소비 저하는 2020년 말까지 프랑스 총 소비의 4.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연말까지 해당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부분실업제도 활용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OFCE는 호텔 및 레스토랑 직원의 16%가 4분기에 부분실업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 Les Echos(2020.10.15), “Coronavirus : les secteurs déjà très affectés par la pandémie vont encore souffrir”,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conjoncture/coronavirus-les-secteurs-deja-tres-affectes-par-la-pandemie-vont-encore-souffrir-1255807>

2) OFCE Policy Brief 78(2020.10.14), “Perspectives Économiques 2020-2021”, <https://www.ofce.sciences-po.fr/pdf/pbrief/2020/OFCEpbrief78.pdf>

프랑스 : 코로나19 위기로 일부 직군 인력 채용에 어려움 겪어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로 인해 2020년 8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¹⁾ 하지만 노동부는 10월 8일 발표한 연구²⁾를 통해 구직난뿐 아니라 인력난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장 관리자나 작업 감독자 등의 직군은 위기 이전의 채용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통계부서인 Dares와 고용센터(Pôle emploi)는 실업자 1인당 구인건수를 기준으로 채용규모, 근로조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 이후로 2019년까지 지표가 더 나빠진 적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인이 가장 어려운 직군은 전기 또는 전자 분야의 제도사, 기계 및 금속가공 기술자, 건물 및 공공작업 엔지니어, 현장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모든 직군에 대한 지표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직군 또는 부문별 코로나19 위기가 미친 영향이 동일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1) Les Echos(2020.10.8), “Coronavirus : malgré la crise, des difficultés de recrutement demeurent”,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coronavirus-malgre-la-crise-des-difficultes-de-recrutement-demeurent-1253870>

2) Dares(2020.10.8), “Les tension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19”,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dares-etudes-et-statistiques/etudes-et-syntheses/dares-analyses-dares-indicateurs-dares-resultats/article/les-tensions-sur-le-marche-du-travail-en-2019>

핀란드 : 정부, 새로운 코로나19 지침 발표

2020년 10월 15일, 핀란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새로 변경된 지침을 발표하였다.¹⁾ 보건부 장관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Kiuru)는 핀란드의 코로나19 상황이 예전보다 심각하며 새로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은 2주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

고 새로운 지침을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코로나19 전략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세의 추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하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재택근무 권고 유지도 포함되었다.

과학문화부 장관 아니카 사리코(Annika Saarikko)는 재택근무에 관한 전국적인 지침은 추후 공지



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이 지침은 연말에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높은 지역에서의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것 역시 포함되었다. 집단 행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상황이 '확산단계(Spreading phase)'에 있는 지역에서는 참석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며, 이는 정부의 3단계 전염병 계획에서 가장 높은 경계 단계다. 한편 정부는 성인들의 취미활동 및 스포츠 등의 참석 인원 수는 지역 자치단체에 의해 제한될 것이나 어

린이, 청소년을 위한 취미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리 안델손(Li Andersson)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교육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되, 원격학습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학습은 지역 각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대면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위생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 사용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Yle(2020.10.15), "Finland urges people to work from home until 2021 as Covid cases spike",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land_urges_people_to_work_from_home_until_2021_as_covid_cases_spike/11597194

일본 :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최고법원 판결 엇갈려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1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우편(日本郵便)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50여 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우편은 전체 노동자 약 38만 명 중 절반가량인 18만 4천여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부양수당과 휴일수당, 연말연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다른 것은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으며, 비정

규직 측에서 제기한 5개 항목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¹⁾

한편 10월 13일 최고재판소는 오사카의과약과 대학(大阪医科薬科大学)과 도쿄메트로(東京メトロ)의 자회사인 메트로코머스(メトロコモース)의 비정규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²⁾ 아사히신문은 이 판례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본 사회의 비정규직 처우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1) 朝日新聞(2020.10.15), 「非社員の待遇差“不合理”最高裁、手当や休暇認める」,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BH54S1NBGUTIL06J.html?iref=pc_ss_date
- 2) 朝日新聞(2020.10.14), 「最高裁“不合理でない”非正社員の退職金・賞与なし 一部命じた高裁判決、変更さ」,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657156.html?iref=pc_ss_date

일본 : 쟁의건수 268건으로 과거 최소치 기록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6일 「2019년 노동쟁의 통계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간에 발생한 모든 노동쟁의(이하 총쟁의)건수는 268건이었다. 이는 2018년 320건에 비해 52건(16.3%)이 줄어든 것이며, 195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단체의 총 참가인원 수는 10만 5,340명으로 전년에 비해 1,998명(1.9%)이 증가했다. 한편 총 쟁의건수 중 실제 쟁의행위를 수반한 쟁의건수는 49건(전년대비 9건(15.5%) 감소), 총 참가인원은 5만 7,345명(전년대비 6,307명(12.4%) 증가)이었다.

쟁의행위를 형태별로 보면 대부분이 ‘파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나절 이상 파업’ 건수는 27건(전년대비 1건(3.8%) 증가, 참가인원은 5,345명(전년대비 4,390명(459.7%) 증가)이었다. ‘반나절 미만 파업’ 건수는 33건(전년대비 9건(21.4%)

감소), 참가인원은 1만 1,609명(전년대비 2,349명(25.4%) 증가)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만 1,002일(전년대비 9,525일(644.9%) 증가)이었다.

쟁의행위를 수반한 쟁의를 산업별로 보면, 의료/복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우편업 10건, 제조업이 9건 순이었다. 행위 참가인원은 의료/복지가 6,5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우편업이 5,919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2,8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운수업/우편업이 7,199일로 두드러지게 많았고, 이어서 도매업/소매업이 3,185일을 기록했다.

요구사항별로 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이 127건(전년대비 35건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총 쟁의건수의 47.4%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이어서 ‘조합보장 및 노동협약’에 관한 사항이 97건(전년대비 9건 증가), ‘경영·고용·인사’에 관한 사항이 86건(전년대비 31건 감소)으로 나타났다.¹⁾

- 1)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 2020年10月号(2020.9.25), 「争議件数は268件で過去最少 労働争議一厚労省調査」,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10/063.pdf>



중국 :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가 더 큰 피해 입어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노동자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¹⁾ 중국에서는 여성노동자의 70% 정도가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업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업종에 종사하던 많은 여성노동자가 실업과 일자리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임금 소득도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3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긴급히 재개해야 할 업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조업, 건축업, 물류업, 공공서비스업 등으로 모두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이었다. 상하이(上海)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 들어 지역 평균임금과 여성이 집중된 업종의 평균임금 차이가 가장 커졌다. 지역 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에 이미 1만 2,000위안(약 200만 원)을 상회한 반면, 여성이 집중된 업종의 평균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폭도 훨씬 작

은 데다가 올해는 오히려 하락해 상하이시 평균임금의 61.34%에 불과한 8,071위안(약 135만 원)을 기록하였다. 상하이시 평균임금은 2020년 들어 다소 하락했는데, 여성이 집중된 업종은 평균임금보다 훨씬 더 큰 하락률을 보였으며, 특히 가사서비스업, 청소업, 보육업 및 유아교육업의 임금 하락률이 가장 커서 이 업종의 2020년 임금은 전년대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여성들이 집중된 병원서비스업과 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이 작년보다 상승했는데도 상하이시 평균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이 집중된 저소득 업종의 비율도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그 비율이 급증해서 2019년 23.41%에서 42.37%로 증가했다. 반면 여성 고소득 업종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서 훨씬 하락한 1.25%에 불과했다. 임금과 일자리 수 모두 전년대비 상황이 악화해서 여성이 집중된 업종의 임금은 올해 2월 이후 전년대비 꾸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일자리 수는 6월 이전까지는 전년대비 더 적다가 7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1) 澎湃(2020.10.19), 「疫情下女性就業情況變得更糟糕了嗎?」,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5847323

중국 : 대졸자 취업난 가운데 성별, 학벌, 출신지역 등이 취업과 연관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874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별, 학벌, 출신지역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등 '대학생 취업문제 연구' 프로젝트 그룹은 2020년 8월 '취업난 대학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¹⁾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6월에도 여전히 구직 중이던 대학생을 '취업난 대학생 집단'으로 파악했는데, 그중 여성(58.5%)이 남성(41.5%)보다 1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이전 1년 동안 특정 구직 플랫폼에 이력서를 제출한 대학 졸업생 중 27.7%의 여성이 여전히 구직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남성 25.5%보다 2.2%p 높았다. 석사 학위자의 취업 난이도에서도 여성은 18.9%, 남성은 12.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이 외에 학벌에 따라서도 취업난의 차이가 컸다. 취업 난이도 지수로 봤을 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점대학'²⁾ 졸업생의 경우 14.7%가 여전히 구직 중이었는데, '비중점대학'의 경우는 26.2%, 그리고 일반 단과대학(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0.9%가 여전히 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난 대학생 집단' 중에서도 일반 단과대학 학생이 52.1%, '비중점대학' 학생이 39.4%를 차지해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신지역에 따른 취업난의 차이도 컸다. '취업난 대학생 집단' 중 호적지가 3선도시³⁾인 학생이 29.2%, 호적지가 4선 혹은 5선도시인 학생이 41.5%를 차지해 이 두 집단이 전체 미취업 대학생 집단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미취업 대학생이 지역별로 각각 중부지역 29.2%, 동부지역 27.6%, 동북지역 25.5%, 서부지역 25.1%로 드러났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미취업 대학생의 비중이 요식업 41.8%, 전시 관리 40.7%, 레저 스포츠 37.7%, 관광 및 호텔경영 34.8% 등으로 이러한 업종이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현실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학생 취업난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수요공급 총량의 문제 뿐 아니라, 기업 측의 요구와 대학생의 능력 및 기대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 新京報網(2020.8.13), 「今年應屆畢業生就業形勢如何? 來看看這份報告」, <http://www.bjnews.com.cn/news/2020/08/13/758573.html>

2) '중점대학'은 중국 정부가 대학 교육 육성을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대학들을 일컫는다.

3) 중국에서는 도시를 1선도시, 2선도시... 등과 같이 구분하는데, 1선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가장 큰 도시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작은 도시를 의미한다.



브라질 : 올해 상반기 파업 355건 발생

노동조합연구소 디에지(Departamento Intersindical de Estatística e Estudos Socioeconômicos: DIEESE)는 9월 29일에 2020년 브라질 노동자의 파업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총 355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민간부문에서 195건, 공공부문 135건, 국영기관 25건으로 나타났다.²⁾ 파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시간은 민간부문과 비교해 공공부문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파업기간의 경우 파업의 60%가 파업 시작 당일에 마무리되었고 10일 이상 지속한 파업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업 중 139건(39%)은 경고성 파업이었으며, 211건(59%)은 무기한 파업으로 진행되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시위성 파업도 15.8%로 나타났다.³⁾ 파업의 동

기는 최소한의 근무조건 등 현행 노동조건의 방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항, 단체협약 및 법에 명시된 권리 이행에 대한 요구가 90%를 차지했다.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가 132건(37.2%)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임금조정 92건(25.9%), 식비 및 의료 지원 68건(19.2%), 공공서비스 개선 57건(16.1%), 노동안전 57건(16.1%), 노동조건 및 장비 지급 50건(14.1%), 직무 및 임금체계 39건(11%) 순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파업 요구를 살펴보면, 135건의 파업이 발생한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재조정 요구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과된 연금개혁 이행 조치에 대한 반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교육·보건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았다. 국영기관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25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안전장비 제공(마스크, 알코올 젤 및 장갑)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항목이 48%를 차지했다. 더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연금개혁 이행 조치 및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항의성 파업도 약 32%를 차지했다. 195건의 파업이 발생한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조건 유지 및 노동법적 권리 준수에 대한 요구가 97%를 차지했다. 특히 체불임금 요구가 61%로 가장 높았고, 단체협약 및 노동법 불이행과 관련된 요구가 27.7%, 고용 유지 및 해고 관련 요구도 12.3%로 나타났다.

디에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은 실업률과 비공식 노동의 증가, 노동조합 활동의 약화에 따라 파업 횟수가 줄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표 1> 2020년 상반기 파업의 주요 요구

요구	파업 빈도(전체 355건)
체불임금(급여, 휴가수당, 연말상여금)	132(37.2%)
임금조정	92(25.9%)
식비, 의료 지원	68(19.2%)
공공서비스 개선 등	57(16.1%)
노동안전 등	57(16.1%)
노동조건 및 장비 지급	50(14.1%)
직무(승진 등) 및 임금체계	39(11%)

주: 동일 파업이 여러 동기를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DIEESE, Sistema de Acompanhamento de Greves(SAG-DIEESE).

<표 2> 2020년 상반기 부문별 파업 주요 요구

부문	파업 빈도 (전체 355건)	주요 요구
공공부문	135	임금 재조정, 연금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국영부문	25	코로나19 안전장비 제공,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연금개혁 및 민영화 반대
민간부문	195	체불임금 지급 및 노동법적 권리 준수, 고용 유지 및 해고

자료 : DIEESE, Sistema de Acompanhamento de Greves(SAG-DIEESE).

노동자의 생존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4월에는 텔레마케팅, 교육 및 건강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으며, 4~6월에는 대도시 대중교통 업체의 임금 지연

및 해고에 맞선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파업, 무엇보다 7월에는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보호장비 제공을 요구하는 배달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상반기 투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 1) 디에지는 브라질 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파업 모니터링 시스템(SAG-DIEESE)’을 가동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 4만 개 이상의 파업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는 주요 언론과 노동조합의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얻는다.
- 2) DIEESE(2020.9.29), “Balanco das greves do primeiro semestre de 2020”, <https://www.dieese.org.br/balancodasgreves/2020/estPesq97balancoGreves1semestre2020.html>
- 3) 브라질은 노동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Greve’,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산 및 업무 중단 파업은 ‘Paralisação(Greves do Protesto)’로 구분한다.

브라질 : 비공식 노동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코로나19 감염률 높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고용관계와 전염병 확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대학의 IRD(Instituto Francês de Pesquisa e Desenvolvimento) 연구소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자의 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오는 11월 15일 5,570개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빈곤 및 피부

색 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별도 항목으로 코로나19 감염과 비공식 노동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의 총인구 중에서 비공식 일자리의 비중이 10%를 차지할 때 코로나19 감염률은 29% 늘어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평균 38%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지자체별 비교 연구에 도입한 결과, 빈곤율이 높고 비공식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11일 기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남쪽지역 플로리아 노폴리스(Florianópolis)에서는 약 23%가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되었는데, 주민 10만 명당 938명이 감염되고 15명이 사망했다. 반면 비공식 노동자의 비중이 41%로 집계된 북쪽지역 보아 비스타(Boa Vista)에서는 같은 날 인구 10만 명당 6,847명이 감염되고 108명이 사망했다. 연구자들은 비공식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¹⁾ 지난 4월에 브라질 보건연구센터(O Centro Brasileiro de Estudos de Saúde: Cebes)에서 발표한 ‘브라질의

코로나19와 불평등’ 연구보고서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발병할 우려도 크다고 예측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건강 및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코로나19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수 있는 소득 보존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²⁾ 브라질은 10월 말 기준 53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이 가운데 15만 명이 넘게 사망하였다.

1) Folha de São Paulo(2020.10.12), “Pesquisa mostra que trabalho informal eleva contágio e morte por Covid-19 no Brasil”,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0/10/trabalho-informal-eleva-risco-de-contagio-e-morte-por-covid-19.shtml>

2) Cebes(2020.4.6), “COVID-19 e Desigualdade no Brasil”, <http://cebes.org.br/2020/04/covid-19-e-desigualdade-no-brasil/>